

자금 세탁 NO, 블록체인 YES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암호 화폐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

# 소비자 보호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화 운영 규제 가이드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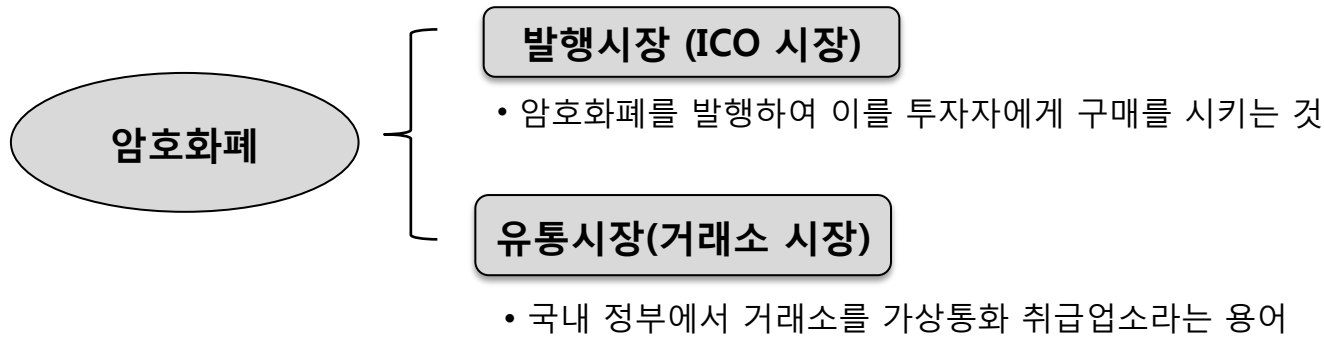
2020. 8. 27

블록체인(특금법)포럼 대표  
경기대 김 기흥 명예교수

#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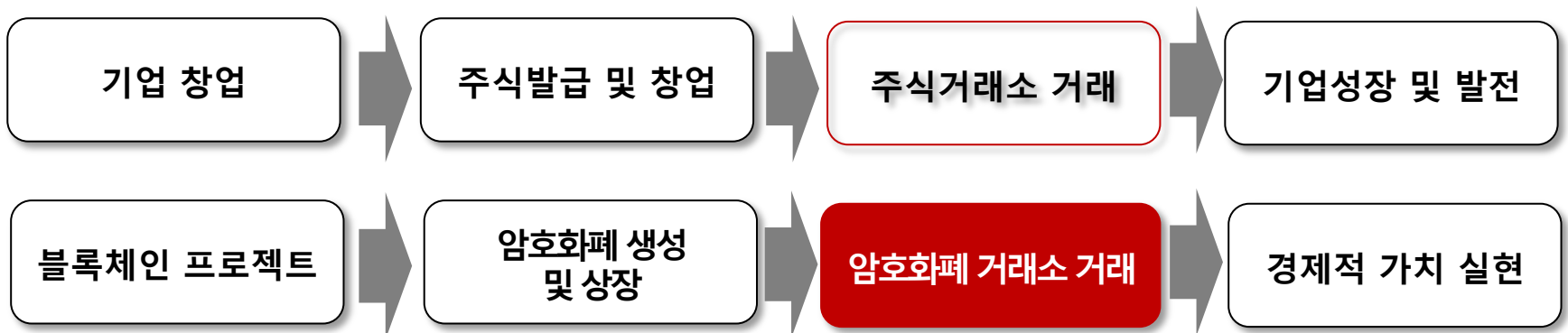
1. 암호화폐 거래소 고찰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단
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응과  
규제가이드 정책 방향

# **1. 암호화폐 거래소 고찰**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 또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digital currency exchange)는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이다. 이를 시장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라는 용어로 불리움



관련 법률	관련 내용	상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제4조의 2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금융회사 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식별절차 ○ 금융회사등의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준수사항
	○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 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 고객확인 강화 ○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계좌를 개설 한 경우 관리 및 이행 사항을 점검 ○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
	○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 금융회사등은 국내외에 소재한 취급업소 현황을 금융회사등의 내부와 금융회사 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금중개회사 인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통신거래 판매업을 등록해야 함	

##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단

## 2017년 이후 한국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상황

### ★ 전통 산업의 블록체인 분야 진입 지연

- 초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drop
-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 부재

### ★ 사기, 다단계 등의 조직적 범죄행위 만연

- 규제를 통한 예방적 기능 미약, 사후적 처벌에만 의존
-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동반성장의 최대 걸림돌

### ★ 해외 진출에 따른 비용, risk 증가

- 해외에서의 ICO로 인한 외환, 조세, 해외 현지 규제 등 risk 증가
- Global market에 대한 새로운 도전 및 시각

### ▶ 심층면접 : 제도권 편입 및 인허가 제도에 대한 견해

구분		내용
찬성	동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li> <li>○ 거래소가 제도권 편입이 되면 현재 애매모호한 법적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되어 거래소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li> <li>○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오히려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li> <li>○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래야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음</li> <li>○ 거래소의 무분별하게 난립방지</li> <li>○ 최초의 유가증권시장(주식시장) 도입 시에도 찬반논란은 있었으며 준화폐가 거래되는데 일정한 기준이나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제도 도입 필요성 체감</li> <li>○ 제도화가 안 된다면 혁신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제도권화를 통한 가상계좌 발급받아 사업운영에 도움</li> </ul>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점에서 국내 거래소 20개도 많은 것 같으며(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제도화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제도화를 통해 준비된 거래소 중심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지원 필요</li> </ul>
	운영 관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라이선스 받은 거래소에 대해 가상계좌 발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o 거래소의 전문 상주인력이나 운용인력 등이 중요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 도입</li> <li>○ 상급 감독기관이 주요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역활하는 것이 중요</li> <li>○ 정치화 되지 않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함</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이나 제도가 정착되어 암호화폐거래소가 안정적인 관리 받을 수 있어서 관련 분야 성장에 기여</li> <li>○ 거래 투명성, 범죄자금 부분은 제도권의 도움이 필요</li> <li>○ 일본의 경우 관련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관련되고 있으며, 국내도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정부 관리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중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예, 일본 블록체인 협회).</li> </ul>



### ▶ 심층면접 : 제도권 편입 및 인허가 제도에 대한 견해(계속)

구분		내용
반 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li> <li>○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허가제도 또는 일정 기준 하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li> <li>○ 만약 제도권으로 편입이 시행된다면 자본금 규모를 맞추기 위해 투자금 유치나 보안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 등에 치중하게 되어 현재 거래소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으로 횡령 및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제도는 필요함</li> </ul>

### ▶ 심층면접 : 가상계좌 사용에 대한 견해

구분	내용
가상계좌 활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저별 계좌번호 생산되어 관리하기에 적합</li> <li>○ 정부와 함께 사업하려는 목적 중 하나는 가상계좌 발급에 유리한 고지 선점, 등록허가제와 같은 거래소 설립 기준이 만들어지면, 라이선스 승인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li> </ul>
활용 기업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빗썸(농협) 코빗(신한) 업비트(기업)</b></li> </ul>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계좌 발급 노력중이나 현재까지 승인받지 못함</li> <li>○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 정부 정책이랑 맞는 방향성</li> <li>○ 농협은행의 계좌거래 가능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li> <li>○ 법인계좌들이 막히는 거래소의 경우 AML 또는 보안성 실사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li> </ul>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계좌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거래가 발생하면 법인계좌 전체가 거래가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li> <li>○ 가상계좌는 문제가 되는 이용자의 가상계좌만 동결된다는 점에서 운영에 큰 차이</li> <li>○ 현재 법인계좌 생성 및 이용에 대해 은행에서도 부정적이어서 법인계좌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li> </ul>
계좌 운영 행태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함.</li> <li>1)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4개 거래소(코인원, 업비트, 코빗, 빗썸)</li> <li>2)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li> <li>3)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중 채굴형 거래소</li> <li>4) 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li> </ul>

### ▶ 심층면접 :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견해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들이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거래량이 많은 상위 거래소로 몰리는 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해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수익이 급감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li> <li>○ 현재 운영을 위한 지출이 연 1억 이상인 반면에 수입은 그보다 적은 수준</li> <li>○ 가상계좌를 받은 4개 거래소 중 두 개 거래소는 기소를 당하였고, 나머지 거래소도 과태료를 받았음. 그 중 한곳은 해킹을 3번이나 당함. 보안이나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 상위 거래소들의 문제가 많으나, 가상계좌 발급 거래소라는 프레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리는 상황임.</li> <li>○ 교차거래, DB거래, 자전거래, 내부 조작 등의 문제 들이 존재하며 해결이 필요함.</li> <li>○ 자극적 경영, 정보 불균형 강화, 이해상충을 무시하는 업체들이 상위 거래소로 올라가 대중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줌.</li> <li>○ 국내 규제강화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임.</li> </ul>
수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수입은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음.</li> <li>○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li> </ul>
정부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와 같은 행위가 발생함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 대응</li> <li>○ 현재는 이유 없이 규제 및 우려를 하고 있음.</li> </ul>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의 경우 투기적 성향이 강함</li> <li>○ 일본과 달리 가격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음</li> <li>○ 우리나라는 알트코인이 80% 이상, 일본은 비트코인 비중이 우세한 편(국가마다 상이)</li> <li>○ 알트코인 비중이 높음</li> <li>○ 유저들이 변동성이 큰 것을 선호.</li> </ul>

### ▶ 심층면접 : 운영 관련에 대한 견해

구분	내용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정되어있으며,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주기적 변동은 아니며,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 될 경우 수수료율 변동</li> <li>○ 수수료율이 변동 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지</li> <li>○ 거래소 마다 수수료 정책 및 변동이 다름</li> </ul>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제공 서비스는 거래소 서비스만 제공</li> <li>○ 사업 다각화를 생각 중이나, 전체적인 산업 침체를 겪다 보니 공식적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는 없음</li> <li>○ 암호화폐 밋업 카페 등 거래소와 일부 연관된 서비스 준비</li> </ul>
내부 정책 및 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으로 윤리규정 및 운영 정책 존재</li> <li>(내부 정책 및 윤리규정이 거래소 별로 상이, 거래소 자체에서 만든 규정으로 신뢰도에 대한 의문존재함)</li> </ul>
회계 및 보안 외부 감사 여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감사여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진행</li> <li>○ 감사 내용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아직 미공개 (회계 감사,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감사 필요)</li> </ul>
소비자 피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협회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해킹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으로 무산</li> <li>○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보험제도는 작동중.</li> <li>○ 현재 해킹과 관련된 보험상품은 시중에 없음.</li> <li>○ 타 거래소와 달리 고객에게 보장하고자 노력중(해외검색 가능 - 실제 보상 지급 사례)</li> <li>○ 거래소 코인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일부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함</li> <li>○ 2만 BTC(예치금) 보유</li> </ul>
거래소 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T(후오비토큰)</li> <li>○ 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외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펀드와 같은 행위에 참여할 때 HT를 제공하는 등 사용 유도</li> </ul>
운영시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거래 시스템 작동하고, 담당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여 대응하고 있음</li> </ul>
주요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및 상장피</li> </ul>

### [암호화폐 거래 정책 및 시장 공정성]

- (1) 암호화폐 거래소들 경우, 자신들의 책임 하에 직접 주문을 내고 있음
- (2) 암호투자자들이 사전적으로 얼마나 거래소 운영에 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가격 조작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주문형태가 존재하는 등에 대한 문제에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임

시장 공정성과 관련 거래는 아래 4개의 정책으로 살펴볼 수 있음.

- (1) 전문적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주문형태
- (2) 자동화된 주문과 관련한 거래 정책
- (3) 가격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래정책들
- (4) 마진 트레이딩 정책

### [암호화폐 관련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구분	내용
주요거래 암호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대시, 모네로 등 주요 상위 거래 가상화폐</li> </ul>
규제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가상통화에 대한 초기 논란은 유사 가상통화의 시세가 매우 가파른 변동 주기를 보이는 것에 따른 투기 광풍과 이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함</li> </ul>
암호화폐가 유발하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이용자의 투기 과열</li> <li>0 투자자의 손실 보호 미비</li> <li>0 시스템의 불안전성으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노출</li> <li>0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마약·도박·유사수신·다단계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li> <li>0 과세 문제의 미정립으로 인한 처리 방안 부재</li> </ul>
규제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li> <li>0 암호화폐의 종류 (성격별)</li> <li>0 채굴방식, 가치증명방식, 거래목적에 따라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짐</li> <li>0 암호화폐는 모두 각각의 고유기술을 보유</li> <li>0 암호화폐 시장</li> <li>0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서비스 창출</li> <li>0 투자자</li> <li>0 암호화폐 매입, 매도자, 가상통화 채굴자, 암호화</li> </ul>

구분	내용
암호화폐와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투자자보호 의미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거래소 폐쇄는 투자자의 존재 자체를 없앴</li> <li>0 투자자 보호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문제 발생</li> <li>0 제도화가 암호 화폐의 존재 자체를 공인한다는 인식으로 발전하는 것에 따른 우려가 존재</li> </ul>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할 필요성 검토</li> <li>0 투자자 보호는 시장 혹은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필요로 할 경우 발생</li> <li>0 암호화폐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신기술의 보호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li> </ul>
규제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 해외의 경우 규제의 목적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나 불법거래 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와는 차이</li> <li>0 버블이 붕괴 후 대중의 불신이 신기술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전환 될 것에 대한 우려</li> <li>0 사기성 모집행위 등에 대한 규범적 통제</li> </ul>

### **3.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응과 규제가이드 정책 방향**

구분	문제점	대응 및 관리방안	추진정책
제도적 측면	제도적 장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 및 대응 방향 수립</li> <li>○ 암호 거래소 인허가 제도</li> <li>○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li> <li>○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li> <li>○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li> <li>○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li> <li>○ 거래소 해킹사고 신속 대응</li> </ul>	(1) 관련 시장 연구 지원 (2) 거래소 인가 요건 (3) 안정성 확보 및 사고 방지 (4)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운영적 측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및 시스템 안정화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신뢰확보</li> <li>○ KYC(KNOW YOUR CUSTOMER) 도입</li> <li>○ 거래소의 통합된 내부 통제 및 고도화된 FDS 관리</li> <li>○ 자금세탁방지</li> <li>○ 거래정책과 시장 공정성</li> <li>○ 거래투명성- 법정 통화 /수수료/고객 자산 보호 안전성/ 정보제공</li> <li>○ 내부자 윤리 규정 도입</li> </ul>	(3) 안정성 확보 및 사고 방지 (4)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시장적 측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난립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를 위한 운영 방향 제시	(2) 거래소 인가 요건
	암호화폐 기반 투기적 거래 성향	○ 암호화폐 거래소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시장 건전화	(3) 안정성 확보 및 사고방지
	이용자 보호 장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자산 보호 및 관리</li> <li>○ 암호 화폐 상장 절차 기준 및 프로세스 확립</li> <li>○ 상장된 암호 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과세</li> </ul>	(4)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 [추진 정책 안]

구분	추진 내용
1. 관련 시장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하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li> </ul>
2. 거래소 인가요건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li> <li>○ 이용자 보호시스템 구축</li> <li>○ 거래소 윤리 의무</li> </ul>
3. 안정성 확보 및 사고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 개소 관리</li> <li>○ 거래소 운영 관리</li> <li>○ 암호화폐 상장절차 및 프로세스 확립</li> <li>○ 암호화폐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li> <li>○ 안전관리 분석</li> <li>○ 이상금융 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및 감독</li> </ul>
4.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 강화 및 고객 보호 시스템 운영</li> <li>○ KYC 도입</li> <li>○ 내부자 윤리 규정 운영</li> <li>○ 암호 거래소 인허가 제도</li> <li>○ 고객 관리 보호와 고객 피해에 대한 보험 및 피해구제</li> <li>○ 자산관리 의무화</li> </ul>

## [거래소 인가요건 수립]

구분		추진 내용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성 확인</li> <li>○ 적정 수준의 자기 자본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함</li> </ul> </li> <li>○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에 관한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 구축</li> </ul>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 구분</li> <li>○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을 통한 정기적 감사</li> </ul>
이용자 보호시스 템 구축	이용자 보호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보호 총괄책임자 및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 수립, 관리, 감독</li> </ul>
	충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li> <li>○ 회사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의 매매에 따르는 위험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함</li> </ul>
거래소 윤리 의무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li> <li>○ 매매 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유출 금지</li> </ul>

## [안정성 확보 및 사고방지]

구분	추진 내용
거래소 개소	o 거래소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정 검토 및 제언
거래소 관리	o 주식거래 관리에 따른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적합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관리 모델 수립 (안)을 제시
암호화폐 상장절차 및 프로세스 확립	o 암호화폐 상장원칙을 법률적으로 제시 (ex. 신뢰성확보, 절차의 간소화, 투명성 확보 등) o 암호화폐의 상장기준 제시(ex. 수수료 기준, 거래소 정책)
암호화폐 정보제공 및 과세 자료 공유	o 정보공시 요건 제시 o 암호화폐 과세 자료 공유 (필요 시 과세 기준 마련 필요)
안전관리 분석	o 금융기관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각종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암호화폐 관리소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제언
이상금융 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및 감독	o 금융기관 FDS(이상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

##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구분	추진 내용
보안 강화 및 고객 보호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ISMS 인증 -정보 보호 조직 -정보 처리 시스템 대책</li> <li>o 정보보안 사고 대응 -암호 키 관리 방안 -암호 키 거래 시 준수 사항</li> <li>o 거래 효율성 - 거래 서버 기술력/ 유동성-거래 시스템/ 고객 정보 및 보호 시스템</li> </ul>
KYC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li> </ul>
내부자 윤리 규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내부자의 거래소의 참여 제한 등</li> </ul>
암호 거래소 인허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등록요건 제시 필요</li> </ul>
고객 관리 보호와 고객 피해에 대한 보험 및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계좌분리 운영</li> <li>o 보험, 피해구제, 암호화폐 예치금 제도 등을 활용</li> </ul>
자산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예치금 별도 보관</li> <li>o 암호화폐 교환 의무 이행을 위한 암호화폐 관리</li> </ul>

##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방안 제언]

구성요소		필요조건	핵심 역량
자산 예치 안전성	법화 건전성	부채비율 관리	규정 집행 강제력
	암호화폐 예치	암호화폐 예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표준 無</li> <li>Open network</li> </ul>
불법 자금 유통 방지	KYC/AML 체계	범죄계좌 DB 및 본인 확인권환	정보력/ 법적 권한
	블록체인	지갑주소 DB 및 FDS	기술력/ 정보력
블록체인 사용성	지갑 Upgrade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및 기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표준 無</li> <li>빠른 기술 변화</li> </ul>
거래 효율성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튼튼한 거래 서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력 : 알고리즘 등</li> </ul>
	가격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적 거래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능력 : 호가설정 등</li> </ul>
거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불균형 이용방지</li> <li>시장교란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공정행위 규제 및 각종 처벌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정 집행 강제력</li> </ul>
자금조달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규정</li> <li>- 프로젝트 실사</li> <li>- 코인 경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능력</li> <li>- 상장 규정 집행 등</li> <li>- 코인 가치 평가 등</li> </ul>

### [암호화폐 상장 기준 및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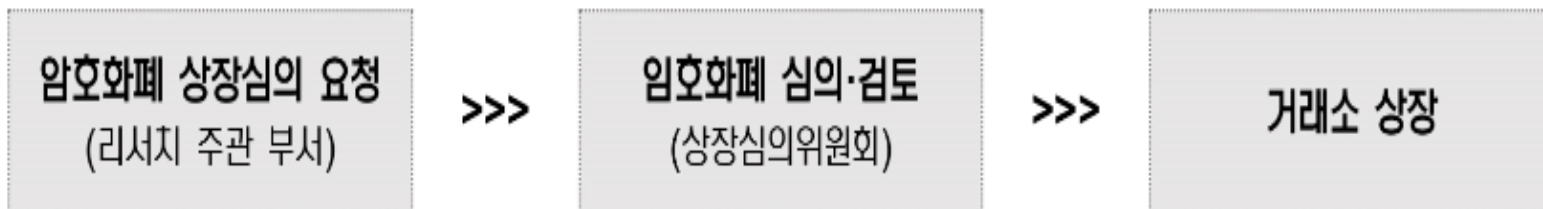
#### 암호화폐 상장 관련 제도의 필요성

- (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초기 단계로서 불완전 및 불법적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등장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2) 암호화폐 상장기준이 거래소 별로 상이하다는 점
- (3)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암호화폐 상장 제도화 부분

- (1) 상장 프로세스
- (2) 상장 기준
- (3) 정보 공개

### [ 상장절차 ]



## [특금법 기반 자금세탁 방지 검토 사항들]

구분	내용
STR (의심되는 거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STR(Supicious Transaction Report)은 의심 거래 보고서(2001)</li> <li>o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li> <li>o 5천만 원(2001) -&gt; 2천만 원(2004) -&gt; 1천만 원(2010) -&gt; 제한 없음(2013)</li> </ul>
CDD/EDD (고객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CDD(customer Due Diligence) 는 고객 확인 제도 (2006)</li> <li>o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 의무 이행</li> <li>o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li> <li>o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및 CDD 거부 시 거래 거절 의무 (2016)</li> </ul>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이다 (2006)</li> <li>o 일정금액 이상의 원화 현금거래 시 일률적으로 FIU에 보고</li> <li>o 5천만 원(06) -&gt; 3천만 원(08) -&gt; 2천만 원(2010) -&gt; 1천만 원(2019)</li> </ul>
RBA (위험기반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평가 및 관리</li> <li>o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는 강화 된 조치, 낮은 분야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 차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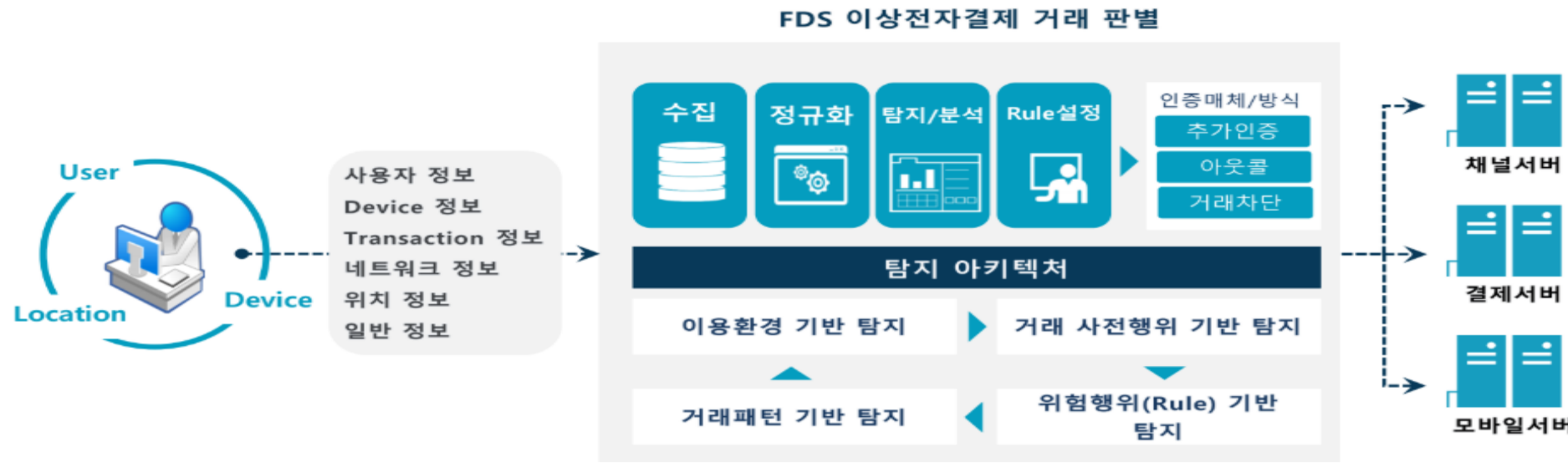
## [암호화폐 거래소의 FDS 운영 현황 및 감독방향]

구분	내용
거래 신뢰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문제 탐지서비스: 암호화폐 매수/매도 주문, 주문취소, 출금거래, 원화 출금</li> <li>○ 블랙리스트 관리, 암호화폐 지갑/계좌 분석</li> <li>○ 실시간 변동사항 보고</li> </ul>
사용자 신뢰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YC, AML, 상시감사, FDS 통합기반 내부통제</li> <li>○ 블랙리스트 정보 공유</li> <li>○ 사고거래 유형 수집 분석</li> </ul>
거래소 신뢰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직원의 조작 추적 및 탐지</li> <li>○ 내부 자체 거래 금지</li> <li>○ 예치금 보관율 체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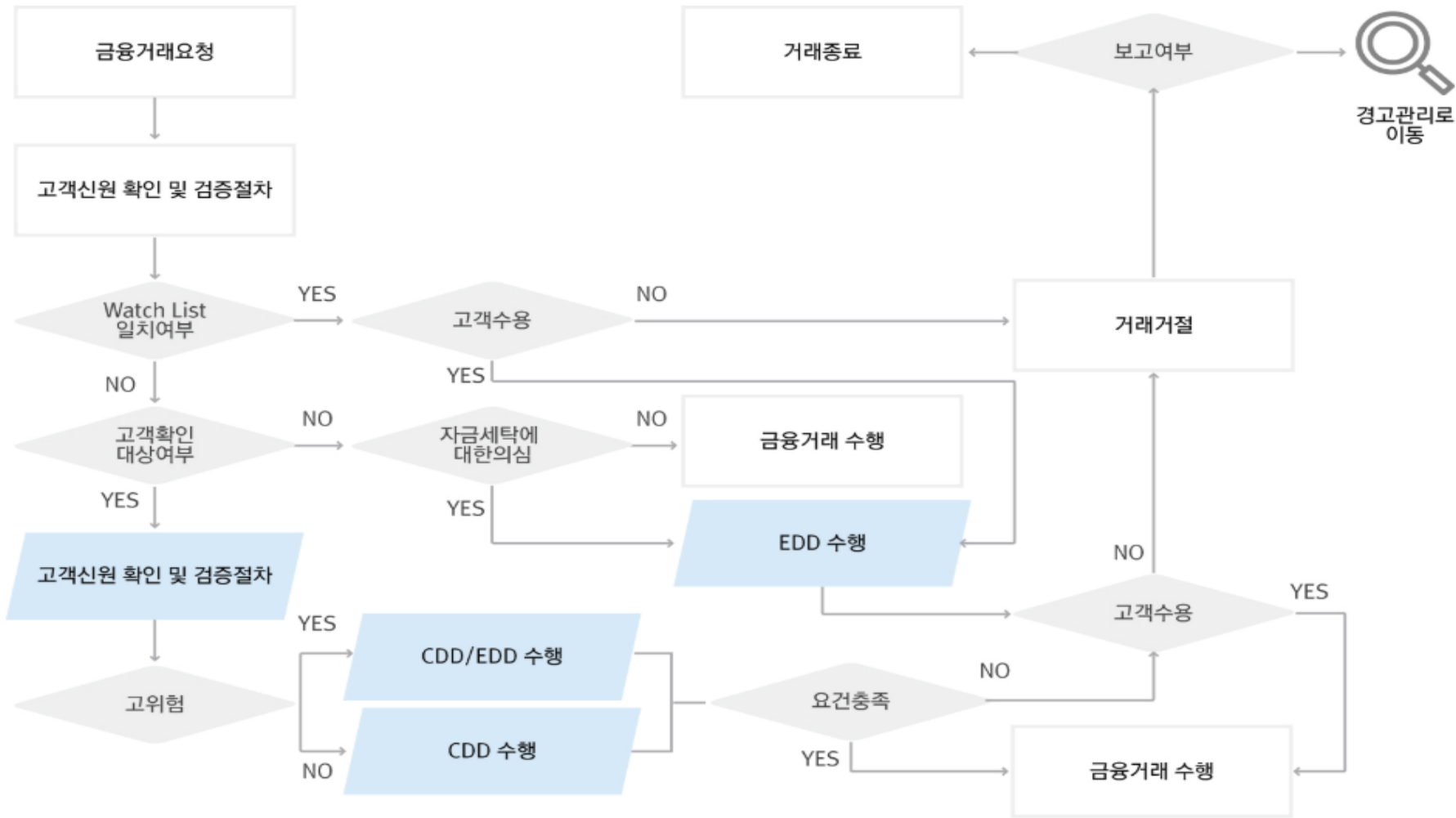


[FDS 운영관리 및 FDS 프로세스]

구분	일반적인 관리	기술기반 통합된 내부통제 관리	내부 통제관리 요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거래소의 한계점 극복</li><li>○ 규제 업무 대응 노하우</li><li>○ 경험 인력 확보</li><li>○ 비용 투자</li><li>○ 감독기관과 협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내부 상시 감사</li><li>○ 사기 탐지</li><li>○ 자금세탁 방지</li><li>○ 기술 기반 관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양한 이용 정보의 수집분석</li><li>○ 실시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성능보장</li><li>○ 다양한 Rule 설정과 실시간 모니터링</li><li>○ 암호화폐 거래소 간 Black List 정보공유</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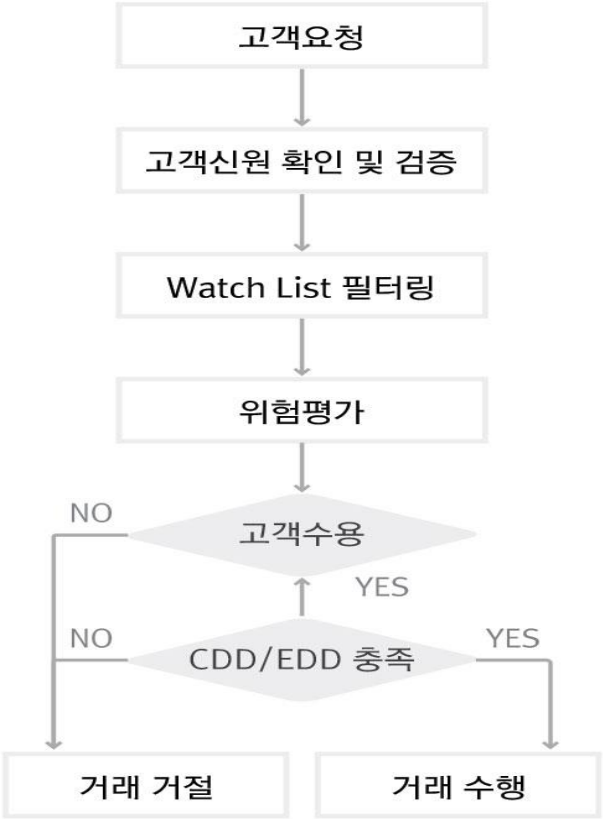


[KYC 확인절차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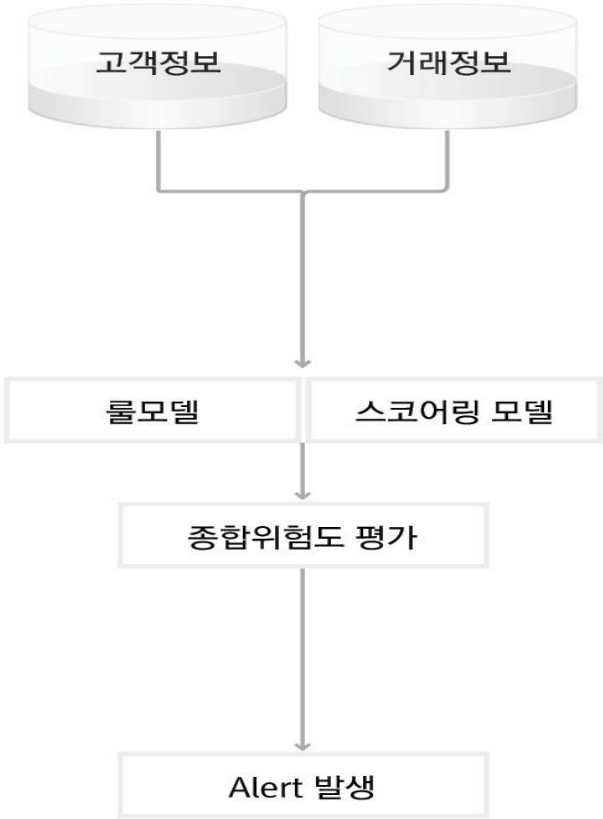


[AML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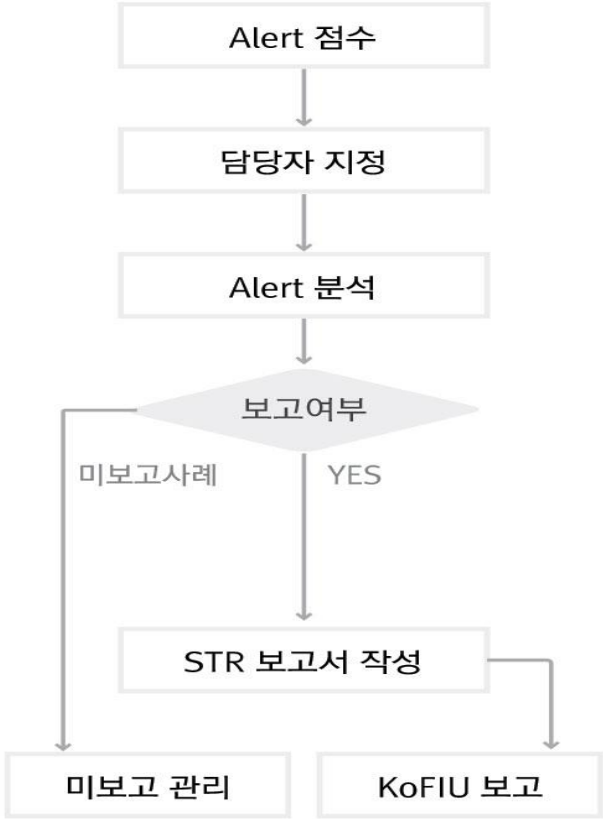
고객확인



거래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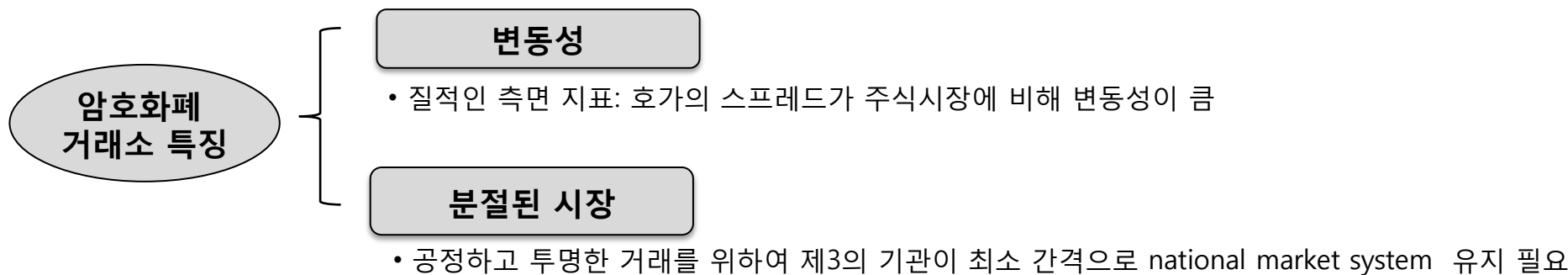
분석/보고



AML 내부통제 Framework  
(자금세탁방지조직/내부운영평가/교육 및 연수/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또는 지침)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 암호 화폐 거래소의 특징 : 분절된 시장



###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필요]

구분	추진 내용
1.	거래소는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 전문가와 같은 업무를 지향하고 거래소는 암호 화폐 거래와 상장 업무 중심으로 운영
2.	중앙화된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인 프라이빗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
3.	거래소는 지정 투자전문가 제도를 만들어 일정 규모이상의 투자를 수행하는 딜러의 경우 심사를 통해 등록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감독 기능을 수행
4.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비하여 시세 조작을 통한 불법 거래를 금지하여야
5.	거래소는 모든 거래 기록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감독기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 전문가는 시장에 공개
6.	거래소 자체 코인은 수수료에 대한 배당의 성격이나 수수료에 대한 할인권의 성격이 크므로 자체 거래소에 상장 시켜서 투기적 수요나 이상 거래

## 2).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규제 이슈

- ★ 규제로 인한 전후방 효과/위험성에 대한 고민
  -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 예측하지 못하는 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
  -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 소극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 ★ 가상자산 시장 버블 및 사기, 다단계 등의 규제 필요성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열풍이 가장 뜨거웠던 국가 중 하나. 강력한 규제 필요성
  -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정책진행
- ★ 가상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 초기에는 다단계/유사수신, 사행성 등에 주목, 해외사례 참고의사 有
  -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어떠한 생산성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 3).가상자산 관련 감독 이슈

---

#### ☐ 가상자산거래의 제도화 문제

- 국내외 상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고려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거래의 제도화 ? 더딤
  - 다만, 일정조건이 성숙되는 경우 제도화 검토 가능
    - 주요국의 추가적인 제도화 움직임 및 국제기구의 동향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 신속 추진 -2020 7월 (기재부)

#### ☐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여부

- ICO에 대한 정부 방침은 투자자보호 필요성, 글로벌 규제체계 미확립 등을 감안하여  
ICO에 대한 금지방침 유지 견지

#### ☐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경우는?

####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4). FATF의 권고안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논의

1

- FATF의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이, ① 규정 자체로 충분히 명확한가, ② 현재의 다양한 BM을 모두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그에 대한 명확한 주석이나 설명을 가지고 있는가, ③ 모든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채택가능한’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있는가?
- FATF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국가 별로 어떻게 상이한가? 국가별 차이점은 왜 발생하는가?
- FATF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이 권고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 5). FATF의 권고안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논의2

- 특금법과 시행령 필요성 ?
- 찬성론 - 제도화 초석 생태계 조성
- 반대론 - 일부 소수 거래소만 혜택 ?
-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 금융기관 간접규제에서 직접규제
- (암호 화폐 취급업자의 중개/매매 등을 고객확인 의무 대상거래로 지정/ 트래블 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 FATF의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 생태계 참여자가 공감할 행위 원칙 (잘 짜여진 규제 체계)
- 영미법권: 새로운 법제화 과정에서 양방향(Two-way) 으  
로 집단지성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 구성원이 따라야  
할 규칙과 제도



## 질의 응답